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I. Kant의 사상을 중심으로

임의영*

공공성은 공과 사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이 글은 근대 이성의 시대에 최고 정점에서 이성의 본질과 주체적 인간의 존재방식을 해명하고 철학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글은 먼저 칸트 사상의 전모를 간략하게 조망한다. 그리고 그의 사상에서 공공성의 의미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적 자원을 발굴한다. 공공성은 공동체의 행위주체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념이다. 이 글은 행위주체, 절차, 내용의 측면에서 사상적 자원을 발굴한다. 행위주체 측면에서 성숙한 인간, 선한 인간, 능동적 시민의 개념을, 절차적 측면에서 이성의 공적 사용, 공개성, 총체적 오류의 불가능성 개념을, 내용적 측면에서 공화국(법의 지배, 자유, 평등, 평화)과 윤리적 공동체(자기완성과 타인의 행복 추구) 개념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칸트 사상에 대한 논의가 갖는 행정학적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주제어: 칸트, 이성, 도덕, 공공성, 공화정

I. 서론

공공성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의 공정성이 무너질 때, 정치적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익성을 외면할 때 사람들의 머리에 가장 쉽게 떠올리는 이념일 것이다. 공공성은 공동체의 행위주체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내용적으로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다만 절차와 내용은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소영진, 2008; 이승훈, 2008; 임의영, 2003)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

*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강원대학교 행정심리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철학, 관료제 등이다(eylim@kangwon.ac.kr).

으로 민주적 절차와 정의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게 되면 개인과 사회 또는 공과 사의 조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2000년대 이후 공공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폭과 깊이가 충분히 넓고 깊다고 하기는 어렵다. 공공성은 연구자들의 발길을 기다리는 미답의 땅이라 하겠다. 공공성의 규범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성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공공성의 철학적 토대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렇다면 어떤 철학자의 사상을 논의하는 것이 유익할 것인가?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들라면, 근대 철학자로는 단연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철학은 칸트로 흘러들어왔다가 칸트로부터 흘러나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칸트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특히 공공성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와 같은 정치사회이론가들은 칸트의 우산 아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공공성 연구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상가라 하겠다. 칸트는 계몽주의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통찰했던 사람이다. 그는 그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 또는 공과 사가 진정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이성, 도덕, 법을 중심으로 모색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칸트는 말 그대로 공공성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칸트의 철학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글의 구성은 우선 칸트 철학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통해 근대적 개인의 발견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검토한다. 그리고 공공성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행위주체, 과정, 내용의 관점에서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공공성과 관련된 담론 자원들을 발굴한다.

II. 칸트 철학에 대한 예비적 고찰

이 장에서는 칸트의 철학적 동기, 철학적 사유의 전환, 인간관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에 대한 관심을 살펴본다.

1. 동기: 경탄과 경외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의 시작을 ‘경탄[놀림]’에서 찾는다. 그렇다면 칸트를 경탄에

빠지게 한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그의 묘비명에 있는 《실천이성비판》의 맺음말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숙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법칙**이다.”(실천: 327)¹⁾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하게 많은 별들이 복잡하고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뉴턴이 발견한 단순한 하나의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이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광대한 우주의 질서 안에서 칸트는 자신을 자연법칙에 따라 चल나 삶을 살다가 사라지는 먼지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칙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인격으로서 감성적인 자연의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관찰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계몽의 시대는 16-17세기 과학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대부분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과학적 사유방법을 사유의 모델로 삼았다. 칸트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 비판서를 저술하기 이전의 칸트는 자연철학 분야에서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칸트는 자연을 지배하는 자연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자유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과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를 사상적 이정표로 삼았다. “뉴턴은 그전까지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보였던 곳에서 처음으로 아주 단순한 질서와 규칙성을 찾았다. … 루소는 처음으로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 아래에 깊게 묻혀있는 인간의 본성과 신의 섭리를 정당화해줄 숨어있는 법칙을 발견했다.”(단편: 9)

2. 철학적 근본 물음에 대하여: 패러다임적 사고

칸트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등을 철학의 근본물음들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론적, 윤리론적, 종교론적 물음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궁극적인 물음으로 수렴된다고 한다. 따라서 칸트가 경탄과 경외의 마음으로 시작한 철학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라 하겠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칸트의 답을 찾는 방식이 패러다임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기존의 철학적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

1) 이후 본문에서 칸트의 국문 번역본을 이용하는 경우는 *The Cambridge Edition of the Works of Immanuel Kant*(1992~2020)를 대조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Kant의 저서는 제 목을 약어 형태로 표시하여 인용한다.

4 「정부학연구」 제28권 제2호(2022)

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자신의 인식론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로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단지 인식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철학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김상환, 2019) 여기에서는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인식론, 윤리론, 종교론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첫째, 인식론에서 인식의 주요 구성요소는 인식의 대상과 주체이다. 칸트 이전에는 인식을 주체가 대상을 단순히 반영하는 거울의 이미지로 이해했다. 그러나 칸트는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 또는 범주가 선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식은 단순히 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인 범주를 대상에 적용하는 구성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모든 우리의 인식은 대상들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 그래서 사람들은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우리가 형이상학의 과제에 더 잘 진입할 수 있겠는가를 시도해 봄직하다. …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의 최초의 사상이 처해있던 상황과 똑같다. … 직관이 대상들의 성질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가를 통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상이 우리 직관 능력의 성질을 따른다면, 나는 이 가능성을 아주 잘 생각할 수 있다.”(순수: 182-183) 칸트는 대상 중심의 인식론을 주체 중심의 인식론으로 대체함으로써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실현한다.

둘째, 윤리론은 일반적으로 옳음-그림의 차원과 좋음-나쁨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한다. 그러다 보니 차원들 간의 선후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윤리적 문제로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좋음[선]을 우선시하는 경우를 목적론이라 하고, 옳음을 우선시하는 경우를 의무론이라 한다. 칸트 이전의 윤리론은 행복과 덕을 강조하는 목적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칸트는 목적론이 가지고 있는 상대성과 특수성을 비판하고, 절대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무론이라는 새로운 장을 연다. 그는 보편적인[형식적인] 도덕법칙을 구성하고, 그것을 유일한 동기로 삼는 행위만을 도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순수 도덕철학을 마련해야 할 극단적 필요성이 있다. … 책무의 근거는 인간의 자연본성이나 인간이 놓여있는 세계 내의 정황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순수 이성의 개념들 안에서만 선험적으로 찾아야 한다. … 무릇,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윤리 법칙에 알맞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은 또한 윤리 법칙을 위하여[때문에]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정초: IV388-389) 칸트는 목적론적[질료적] 윤리론을 의무론적[형식적] 윤리론으로 대체함으로써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실현한다.

셋째, 종교는 신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 칸트 이전에 신의 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기적, 신비, 계시의 경험과 율법학자들이나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 증명되었다.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다. 칸트는 계시종교가 신에 대한 노역신앙을 요구하며, 인간의 자유와 이성의 주체적 사용을 억압하고, 때로는 종교 간의 갈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잔인한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고 본다. 반면에 칸트는 도덕과 종교의 관계에서 도덕의 우선성을 강조한다. 그는 종교의 도덕화 또는 실천이성에 기초한 도덕종교 또는 이성종교의 가능성을 개진한다. 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으나,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강화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요청할 수는 있다고 본다. 도덕적 행위가 현세에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덕행과 행복의 비례적 보상을 보증하는 존재로서 신이 요청될 수는 있다는 것이다.(실천: 261-274) 도덕법칙에 따라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인이며, 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신의 명령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잔인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도덕으로서의 자연종교는 하나의 순수한 실천적 이성 개념이다. ... 사람들은 모든 인간에게 이에 대해 실천적으로 확신시킬 수 있고, 적어도 이 종교의 작용을 누구에게나 의무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종교는 참 종교의 증대한 요건, 곧 누구에게나 타당함, 다시 말해서 보편적 일치라는 뜻에서의 보편성의 자격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종교: 395) 칸트는 계시종교를 이성종교 또는 도덕종교로 대체함으로써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실현한다.

칸트는 인식론적으로 인식의 중심으로서 인간의 주관율, 윤리론적으로 도덕법칙의 입법자로서 인간율, 종교론적으로 이성종교의 중심으로서 인간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칸트가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는 역설적이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통해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어냈지만, 칸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통해 인간을 세계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3. 철학적인 궁극적 물음에 대하여: 자유롭고 실천적인 인간

칸트는 인식론, 윤리론, 종교론과 관련된 근본물음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인 물음으로 수렴된다고 보았다. 나는 칸트의 인간관을 이해하는 열쇠가 자유와 실천에 있다고 본다. 요컨대 인간의 존엄성의 근원이 자유에 있으며, 인간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존재라는 생각은 인식론, 윤리론, 종교론을 횡단하고 있다.

첫째, 칸트는 인간 본성의 고유성을 자유에서 찾는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말할 때, 이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러나 칸트는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유에 보다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오직 이성적 존재만이 목적 자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은 단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 이성이 없다면 어떠한 존재도 목적 자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의식할 수도 없고 성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이 인간이 목적 자체로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성을 갖는 원인은 아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엄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 자유가, 오직 자유만이 우리를 목적 자체로 만든다.”(Guyer, 2007: 15 재인용)

인간 존엄성의 근원으로서 자유는 칸트가 철학을 건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유 개념은, 그것의 실재성이 실천 이성의 명증적인 법칙에 의해 증명되는 한에 있어서, 순수 이성의, 그러니까 사변 이성까지를 포함한, 체계 전체 건물의 마룻돌을 이룬다.”(실천: 37) 그렇다면 칸트가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순수: 724-725) 하나는 경험과 무관한 예지계의 초월론적 자유 개념으로서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능력’ 즉 ‘자기원인성’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자연법칙에 종속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현상계에서 작용하는 실천적 자유 개념으로서 ‘감성적 충동에 의한 강요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로부터[스스로] 규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실천적 자유는 감성적 충동이나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스스로 원칙을 규정하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로서 자기입법 또는 자율을 내포한다.(실천: 92) “자유는, 비록 자연법칙들에 따르는 의지의 성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전혀 무법칙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변적인 법칙들에 따르는 원인성이 되, 그러나 특수한 종류의 것임에 틀림없다.”(정초: IV446)

둘째, 인간은 실천적 존재다. 실천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행동한다는 말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을 인도하는 명법은 가언적이거나 정언적이다. “행위가 한낱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 즉 수단으로서 선하다면 그 명법은 가언적인 것이다. (반면에) 행위가 자체로 선한 것으로 표상되면,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이성에 알맞은 의지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즉 의지의 원리로 표상되면, 그 명법은 정언적인 것이다.”(정초: IV414) 가언명법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A를 성취하려면, B를 하라’는 형식을 취한다. 가언명법에는 숙련[기량]과 영리[수완]의 실천원리가 있다. 숙련의 실천원리는 목적이나 의도의 선악을 따지지 않고, 미확정적인 목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숙련의 실천원리의 대표적인 예다. 이는 공부의 결과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공부를 통해 체계적인 지식을 쌓으면 나중에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영리의 실천원리는 목적의 미

확정성을 전제로 하는 숙련의 실천원리와 달리 목적의 확정성을 전제로 한다. 모든 인간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목적은 행복[또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영리의 실천원리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표명한다. 행복을 위해 좋은 친구를 사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충고가 영리의 실천원리에 해당된다. 정언명법은 목적을 전제로 하는 가언명법과는 달리,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다. 이 명법은 행위의 질료나 결과에 관여하지 않고, 형식과 그것으로부터 행위 자체가 나오는 원리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는 지혜[도덕]의 실천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종류의 원리들에 따른 의욕은 각기 의지에 대한 강요가 같지 않음에 의해서도 판명하게 구별된다. 이제 이 점을 명료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원리들을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장 적절하게 명명할 수 있다. 그것들은 숙련의 규칙들, 영리의 충고들, 도덕의 명령들 중 하나라고 말이다. … 첫 번째 명법을 **기술적** …, 두 번째를 **실용적** …, 세 번째를 **도덕적**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정초: IV 416-417) 그렇다면 세 가지 실천 유형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기술적, 실용적, 도덕적 행위는 무차별적으로 동등하지 않다. 기술적, 실용적 실천에 대한 도덕적 실천의 우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Hinske, 2004: 109)

4. 근대적 개인의 발견과 사회적 조화의 추구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중심성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공동체 중심적인 관점에서 근대적 관점으로의 이행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을 자유에서, 인식론적 특성을 이성에서 찾는다. 자유롭고 이성적인 인간은 공동체에서 벗어난 개인의 이미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의 철학이 갖는 의의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발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근대사회에 던져졌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개인이 되었다. 개인으로서 인간이 당면한 과제는 자유의 짐을 지고 자신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수많은 다른 개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의 사상에는 개인과 사회의 진정한 조화, 또는 사와 공의 진정한 조화를 추구하는 공공성의 이념이 저변에 깔려있다고 하겠다.

Ⅲ. 칸트 사상과 공공성

공공성은 공동체의 행위주체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내용적으로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공공성의 개념은 행위주체, 절차,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공성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칸트의 사상에서 이론적 자원을 발굴한다.

1. 행위주체: 자율적 주체로서 개인

1) 계몽: 성숙한 인간되기

일반적으로 칸트는 계몽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계몽주의의 핵심은 이성의 횡포가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인류는 진정한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의 사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칸트는 그 어떤 계몽주의자들보다도 이 문제에 자신의 철학적 노력을 집중한 사상가이다.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2020)》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이성을 사용할 용기와 결단을 촉구한다. 이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칸트는 자신의 지성을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미성숙, 미성년의 상태로 규정한다. 그런데 그 미성숙 상태의 궁극적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혁명적인 마음의 결단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고 강변한다.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숙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숙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미성숙 상태의 책임을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은, 이 미성숙의 원인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을 경우이다. 그러므로 ‘사파레 아우테!’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하는 것이 계몽의 표어이다.”(계몽: 28)

그렇다면 칸트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계몽을 방해하는 요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방해요인을 지적한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적인 한계다. 사람들은 게을러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보다는 누군가가 대신 생각하고, 대신 책을 읽어주고, 대신 양심을 지켜주는 데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문제다. 사회적인 관습과 여론, 정치적인 역학

관계, 종교적 교리나 율법, 경제적인 불평등과 같은 요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칸트가 주목하는 것은 마치 자식을 과잉보호하는 부모들과 같은 선의의 후견인이나 후견 정치인들이 피보호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이다. 악의적 전제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기 용이하나 선의의 전제는 그러한 대상으로 인식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칸트는 ‘은밀한 전제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진정한 의미의 독재자는 국민들에게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해질 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면적으로 성숙에 이르는 길을 지속적으로 가로막는 자다.”(Hinske, 2004: 96)

그렇다면 이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칸트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이성비판을 시도한다. 이성비판은 이성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도구로서의 이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첫째,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현상계에서는 이성을 사변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성의 이론적 사용에서 핵심은 선험적인 범주와 개념으로 대상을 규정하는 지성이 된다. 이러한 범주와 개념으로 초감각적인 본체계에서까지 규정하려 하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월권으로 본다. 신, 자유, 영혼불멸, 세계에 대한 지성적 인식이 갖는 한계를 드러낸 칸트의 변증론은 그 한계를 논증하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주목할 만하다. 둘째, 초감각적인 본체계에서는 자유를 기반으로 이성을 실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성의 실천적 사용은 이성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성은 감각적인 충동이나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따라야 할 도덕적 원칙을 스스로 세우는 입법화의 도구로 이해된다. 선험적으로 도덕법칙을 구성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유는 도덕법칙의 존재근거이고, 도덕법칙은 자유의 인식근거이다.(실천: 37) 그렇다면 실천이성은 신과 영혼불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신과 영혼불멸을 증명하는 것은 실천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만, 도덕적 이유에서 신과 영혼불멸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동일한 이성이 관심에 따라 이론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론이성(사변이성)과 실천이성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칸트는 기본적으로 실천이성이 이론이성에 대해 우위를 갖는다고 본다. “순수 사변이성과 순수 실천이성이 하나의 인식으로 결합함에 있어서 ... 실천이성이 우위에 있다. 이러한 예측관계가 없다면, 이성의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만일 양자가 단지 병렬되어 있다면, 사변이성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경계를 엄격하게 치고 실천이성으로부터 자기 영역에 들어오려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실천이성은 그 경계를 모든 것

너머에까지 넓혀, 필요할 때는 사변이성을 자기 안에 포섭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 실천이성이 사변이성에 예속되어 질서가 역전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관심은 궁극적으로 실천적인 것이고, 사변이성의 관심조차 단지 조건적이고 실천적 사용에서만 완성되기 때문이다.”(실천: 257-258)

칸트에 따르면,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계몽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또한 이성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을 위해서는 이성을 이론적으로 사용하고, 의지의 자유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실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성의 이론적 사용은 실천적 사용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실천에 있어서 기술적, 실용적 행위가 도덕적 행위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결론적으로 칸트는 이성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계몽의 기본 정신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개인이 자율적 주체, 즉 도덕적 주체 및 법적 주체로 탄생할 수 있다고 본다.

2) 도덕적 주체: 선한 인간되기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본성 안에는 한편으로는 선의 근원적 소질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악으로의 성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질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을 의미하며, 성향은 인간 자신에 의해 획득되거나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칸트는 세 가지 유형의 선의 근원적 소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는 동물성의 소질이다. 단순히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본능적이고 순전히 기계적으로 자기애를 추구하는 소질이다. 자기 보존, 성충동에 의한 자기종(種)의 번식, 다른 인간들과의 공동생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인간성의 소질이다. 생명체이면서 동시에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또는 타산적으로 자기애를 추구하는 소질이다. 셋째는 인격성의 소질이다.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자로서의 인간이 도덕법칙 그 자체를 행위의 동기로서 존중하는 소질이다. 동물성의 소질은 이성을 그 뿌리로 갖지 않으며, 인간성의 소질은 실천적이되, 단지 다른 동기들에 봉사하는 이성을 그 뿌리로 갖고, 인격성의 소질만이 그 자체로 실천적인,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으로 법칙수립적인 이성을 뿌리로 갖는다. (종교: 188-193)

그렇다면 이성에 의해 입법된 도덕법칙은 무엇인가? 칸트에 의하면, 개인의 주관적 의지에 대해서만 타당한 주관적 원칙을 ‘준칙’이라 하고, 이성적 존재자 일반의 의지에 타당한 객관적 원칙을 ‘법칙’이라 한다.(실천: §1) 법칙은 보편성과 절대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이며 정언명법의 형태를 취한다. 도덕법칙은 개인의 행위에 관한 원칙이 아니라 개인의 준칙 제정에 관한 원칙이다. 칸트는 동일한 도덕법칙을 세 가지 방식으로 제시한다.

첫째는 기본형 도덕법칙이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실천: §7) 이는 사람들이 준칙을 세울 때, 그 준칙을 모든 사람들이 세웠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칙에 내재된 원리는 ‘보편성 검증의 원리’라 할 수 있다. 보편성 검증은 비록 개인의 주관적 추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적 삶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원리이다. 이는 칸트 철학에서 공공성 담론의 자원을 발굴하는 마중물이라 하겠다.

둘째는 목적형 도덕법칙이다. “내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나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정초: IV429) 이는 사람들이 행위준칙을 세울 때, 그 준칙이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보라는 것이다. 목적형 도덕법칙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권 개념의 토대를 제공한다.

셋째는 공동체형 도덕법칙이다. “모든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준칙을 통해서 언제나 보편적인 목적의 나라의 입법자인 것처럼 행위하라.”(정초: IV438) 목적의 나라는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보편타당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나라를 의미한다.(정초: IV433) 사람들이 행위의 준칙을 세울 때, 자신이 목적의 나라의 입법자인 것처럼 가정하고 그 준칙을 입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해보라는 것이다. 목적의 나라는 칸트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공화국과 윤리적 공동체의 원형이라 하겠다.

칸트에 따르면, 악은 도덕법칙과 그밖에 다양한 행위의 동기들 간의 관계에 의해 판정된다. 그는 도덕법칙을 다른 동기들의 주변으로 밀어내는 것을 악으로 본다. 인간에게는 도덕법칙을 주변화하려는 뿌리 깊은 성향이 존재한다. 악으로 인도하는 성향을 단계적으로 보면, 첫 단계는 도덕법칙을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허약성의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비도덕적 동기들과 도덕적 동기들을 뒤섞으려는 불순성의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도덕법칙으로부터의 동기를 다른 동기들 뒤에 놓는 준칙을 세우려는 악의성의 단계이다.(종교: 193-196)

선한 소질과 악의 성향이 대립하는 인간 존재의 애매성 속에서 악보다는 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의 운명이다.(강영안, 2000: 10)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단지 예의바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도

덕적으로 선한 사람과 예의바른 사람의 행위가 도덕법칙에 맞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후자는 도덕법칙을 행위의 유일한 동기로 삼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전자는 도덕법칙만을 유일한 동기로 삼는다.(종교: 196-197) 또한 악한 사람은 단순히 악한 준칙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선한가 악한가의 차이는 그가 그의 준칙 안에 채용하는 동기들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즉 준칙의 질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둘 가운데 어느 것을 다른 것의 조건으로 만드느냐 하는 종속관계(즉 준칙의 형식)에 있을 수밖에 없다.”(종교: 207)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행위의 여러 동기들 가운데 도덕법칙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사람을 말한다. 도덕법칙과 다른 동기들의 관계는 바로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주체는 자유의지를 대전제로 한다. 결국 선한 인간은 도덕법칙을 행위의 유일한 동기로 삼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인격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능력이 있는 주체이다. ... 인격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 수립한 법칙들 외의 다른 법칙들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윤리: VI223)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적 주체는 자율적 주체이자 책임적 주체라 하겠다.

3) 법적 주체: 능동적 시민 되기

국가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다수 인간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국가의 구성원은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그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법적 주체’라 하겠다. 법적 주체의 문제는 《법이론》의 §46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가의 구성원을 국가의 시민이라 일컫는다. 국가의 시민과 분리될 수 없는 권리는 법률적 자유, 시민적 평등, 시민적 자립성이다. 법률적 자유는 자기가 동의한 법률 외에는 어떠한 법률도 따르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시민적 평등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구속할 수 있는 그만큼 자신을 구속할 수 있는 사람 이외에 자신의 권리를 구속할 수 있는 어떠한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적 자립성은 사람이 자신의 생존과 실존을 타인의 의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능력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적 자립성은 권리문제에 관한 타인에 의해서 대표되어서는 안 되는 시민적 인격성의 근간이다.

칸트가 법적 주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하는 것은 자립성이다. 그는 법적 주체로서 시민적 자립성의 근거를 ‘투표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찾는다.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이란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칸트는 투표할 수 있

는 능력이 있는 시민을 '능동적 시민'으로, 그렇지 않은 시민을 '수동적 시민'으로 범주화한다. 상인이나 수공업자에게 봉사하는 도제, 하인, 미성년자, 여자,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시민이지만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수동적 시민으로 분류된다. 칸트는 모든 시민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대우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질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러한 투표권이 수동적 시민이 능동적 시민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계몽과 교육은 수동적 시민이 능동적 시민으로 상승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자립성이 있는 법적 주체는 입법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주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율적 주체는 도덕적 주체이자 법적 주체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의 독립성이 아니라 지배관계 또는 권력관계로부터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자율은 강제가 부재하는 상태를 지향하는가? 그렇지 않다. 자율은 법칙을 부과하는 행위이고, 법칙에는 필연적으로 강제성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자유와 강제를 조화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는 칸트의 교육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들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법적 강제에 대한 복종과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능력을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강제는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를 도야할 것인가? 나는 나의 학생이 자신의 자유의 강제(또는 자유를 위한 강제)를 견디는데 익숙해지도록 할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자유를 잘 사용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은 단지 기계적인 과정에 불과하고, 교육을 받은 학생일지라도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 것이다. 그는 자립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사회의 불가피한 저항을 일찍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교육: 447)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자유와 강제의 조화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2. 과정: 소위 공론장의 구성 원리

칸트 본인이 공론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공적 사용, 공개성, 총체적 오류의 불가능성 등과 관련된 논의들은 아렌트, 하버마스, 롤스 등과 같은 현대의 공론장 이론가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다. '소위' 공론장과 관련된 칸트의 논의들은 공공성의 과정적 측면에서 자원이 풍부하게 묻혀있는 광택이라 할만하다.

1) 이성의 공적 사용: 공적 토론

칸트의 '이성의 공적 사용'은 현대의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공론장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성의 공적 사용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는 이 개념을 계몽과 연결시킨다. "계몽을 위해서는 자유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라고 이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해가 없는 자유, 즉 모든 국면에서 그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다. ... 이성의 공적인 사용은 언제나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성의 공적 사용만이 인류에게 계몽을 가져올 수 있다. ... 내가 말하는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지식인/학자로서 독자 대중 앞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이성의 사적인 사용은 그에게 맡겨진 어떤 시민적 지위나 공직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계몽: 15-16)

이러한 언명에 담긴 이성의 공적 사용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이성의 사용은 권력 관계에 민감하다. 칸트가 이성의 사적 사용의 사례로 든 경우를 보면,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시민, 교회에 복종해야 하는 성직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 등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권력관계에서 복종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자유이다. 이성의 공적 사용을 위해서는 관습, 여론, 권력, 검열 등과 같은 외적인 압력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이성의 공적 사용은 제한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청중으로 하는 것이다. 이성의 공적 사용과정에서 화자는 자신과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다양한 청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성의 공적 사용에는 다른 의견들이 부딪치고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처럼 이성의 공적 사용은 불확실성과 열린 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이성의 공적 사용은 인류의 계몽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계몽은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미신과 주술로부터 벗어나는 것, 미몽에서 깨어나는 것, 한 마디로 '세계의 각성'을 의미한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자각에서 소위 비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성의 공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계몽은 곧 비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Foucault, 1999, 2016) 그런 의미에서 계몽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의 차원—통시적으로 그리고 공시적으로—에서 이루어지는 거대 기획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성의 공적 사용과 개인의 사유 간에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사유는 대화의 형태를 취한다. 개인적 사유는 묻는 자와 답하는 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내적 대화다. 외적 대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다. 칸트에 의하면, 내적 대화와 외적 대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Arendt, 2002) “사람들은 상위의 권력이 우리에게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할 수 있지만, 결코 생각의 자유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전하고 우리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바로 그 외부의 권력이 사람들에게서 생각의 자유도 박탈한다고 말할 수 있다.”(사유: 247)

2) 공개성

공법의 제정과 관련된 법법칙은 기본적으로 이성의 공적 사용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법이든 법을 제정할 때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법의 내용과 입법취지가 공개되어야 한다. 어떠한 법이든 입법 내용과 그 취지가 공개될 때, 공적 토론을 통해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법적인 주장은 공개적일 수 있어야 한다.(평화: 81) 칸트는 공개성의 법법칙을 소극적인 형식과 적극적인 형식으로 표현한다.

먼저 소극적인 공개성의 법법칙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는 그 준칙이 공개될 수 없다면 부당하다”(평화: 82)는 것이다. 이 원칙은 윤리적일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준칙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부딪히게 될 비판과 반대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이는 그 준칙이 보편적 동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준칙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소극적인 법법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위 준칙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기준이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공개성의 법법칙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개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준칙은 법 및 정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평화: 89)는 것이다. 준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개를 해야만 하는 준칙은 (행복과 같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개를 필요로 하는 준칙은 사람들의 목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공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법이론의 실행’(Gerhardt, 2007: 239-246)으로서 다시 말해서 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실행하는 정치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3) 총체적 오류의 불가능성 원리: 토론 참여자의 마음자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의 오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토대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종교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타인의 오류에 대한 관용을 강조한다. 그러나 오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의 총체적 오류의 불가능성 원리를 발견한 Hinske(2004)의 통찰은 주목할 만하다. 총체적 오류의 불가능성에 대한 칸트의 생각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칸트가 언급한 것들 가운데 하나를 보자. “역사적(경험적) 주장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완전히 틀릴 수 있다. 예들 들어 예수 탄생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예수 탄생 이전에 일어났다는 식으로 완전히 틀릴 수 있다. 반면 이성적 판단에서는 누군가는 항상 한 측면에서만 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에 대해 우선 이 옳은 것에 관해 동의하고 그리고 그 후에 옳지 않은 덕을 한계로서만 부연하는 것이 절적이다.”(Hinske, 2004: 57 재인용)

총체적 오류의 불가능성 원리가 제시하는 행위규칙은 다음과 같다.(Hinske, 2004: 69-75) 첫째,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반박하기에 앞서 그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진리를 조사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 노력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되는 생각과 의견에서조차도 진리의 계기를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개의 규칙은 보편적 이성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을 존중하고, 보다 많은 인식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길을 열어준다. 셋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를 ‘확장된 사유의 준칙’(판단: §40)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모든 타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이 대상들을 모든 인식 가능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각각의 관점에서의 관찰들이 다른 관점에서의 관찰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측면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그 지평을 미시적인 관찰에서 일반적인 전망으로 확장하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편지: 1772.2.21.) 보편적 인간 이성의 이념을 강조하는 이유는 보편적 인간의 이성이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넷째,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오류가 드러나면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²⁾ 이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자신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2) 사람들은 자신의 오류가능성보다는 타인의 오류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라는 것은 타인의 총체적인 오류불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것을 말한다. “만약 누군가 진정으로 진지하게 진리를 발견하려고 속고한다면 … 그는 배운 것과 스스로 생각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비판에 종속시킨다.”(Hinske, 2004: 75 재인용) 이상에서 제시된 총체적 오류의 불가능성 원리의 행위규칙들은 사람들이 공적인 토론에 참여할 때 견지해야 할 마음의 자세라 하겠다.

3. 내용: 공화국과 윤리적 공동체

공공성의 내용적 측면에서 ‘정의’의 문제는 칸트의 법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칸트는 개인들의 주관적인 준칙들이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실정법보다는 그러한 준칙과 법을 제정하는 데 따라야 할 원칙, 다시 말해서 형식적 입법의 법칙에 초점을 맞춘다. 칸트에 따르면, 입법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행해져야 할 행위를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표시하는, 다시 말해서 그 행위를 의무로 만드는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행위의 선택 근거를 주관적으로 법칙의 표상과 연결시키는 동기이다.(법: 132) 입법의 형태는 ‘동기’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어떤 행위를 의무로 만들고, 이 의무를 동시에 동기로 만드는 입법 형태는 윤리적인 것이고, 의무 이외에 다른 동기를 허용하는 입법 형태는 법리적인 것이다.(법: 133) 행위의 동기가 무엇이든 행위와 법칙이 일치하는 경우를 합법성이라 하고, 행위의 동기가 법칙이 요구하는 의무 그 자체인 경우를 도덕성이라 한다.(법: 133) 칸트는 《윤리형이상학》에서 전자와 관련하여 법이론을, 후자와 관련해서는 덕이론을 전개한다.

합법성을 추구하는 법리적 입법 형식, 즉 법법칙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관없이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칸트는 합법성이 이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국가 형태로 공화국을 제시한다. 도덕성을 추구하는 윤리적 입법 형식, 즉 도덕법칙은 사람의 마음이 선의 원리에 따라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합법성은 개인의 동기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공화국은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성에 기초한 윤리적 공동체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서 그는 합법성과 도덕성 또는 법법칙과 도덕법칙의 일치를 지향한다. 여기에서는 공화국과 윤리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공성의 내용적 자원을 발굴한다.

1) 공화국: 법의 지배, 자유, 평등, 평화

칸트는 국가를 법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국가는 법적 상태에 있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관심 속에서 결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기원에 대한 생각은 이념으로서 원초적 계약을 전제로 한다. 법이 없는 자연 상태는 곧 전쟁 상태이기 때문

에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적이다. 사람들은 당면하게 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평화적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동의 관심 속에서 계약을 통해 법적 상태로 이행한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모두는 공민적 정치체제에 속해야만 한다.”(평화: 25-26) 이처럼 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국가라 한다.

인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자신들을 합일시키는 하나의 의지 아래 법적 상태, 즉 인민들이 권리로 규정된 것을 향유할 수 있는 헌정체제[헌법]을 필요로 한다. 상호관계 속에서 하나의 인민 안에 있는 개인들의 이러한 상태를 시민적 상태라 하고, 법적 상태에 있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전체는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국가라고 일컬어진다. 국가는 법적 상태에 있고자 하는 모든 이의 공동의 관심을 통해 결성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공화국(*res publica latius sic dicta*)라 불린다.(법: §43)

국가의 본질을 구성하는 법의 보편적 이념은 무엇인가? “어떤 행위든 보편적인 법에 따라 모든 사람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다면, 또는 그 행위의 준칙에 따른 각자의 선택의 자유가 보편적인 법에 따라 모든 사람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정당하다.”(법이론: 151) 보편적 법의 이념은 실정법을 제정할 때 따라야 할 규칙, 즉 법법칙이라 하겠다. 법법칙은 법을 제정할 때, 그 법이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공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법의 이념이 지향하는 것은 자유이다. 칸트는 이러한 보편적 법의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정체를 공화정이라고 생각한다. “공화정은 인간의 권리에 완전히 적합한 유일한 제도이다.”(평화: 53) 보편적 법의 이념에 따르면, 칸트의 공화정은 현대적 의미의 ‘법의 지배’를 통해 모든 사람의 자유의 공존을 실현하는 정체다.

칸트는 공화정을 국가적 차원만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정체로 본다. 그래서 그는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공화정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칸트에 따르면, 공화정은 기본적으로 자유의 원리, 의존의 원리, 평등의 원칙에 의해 확립되는 정체다.(평화: 26)

첫째, 자유의 원리는 보편적 법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칸트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한에서의 행위의 가능성’이라는 일반적인 자유의 개념을 법률적인 자유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는 ‘내가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률에도 복종하지 않을 권능’(평화: 26)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율’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법적 강제는 자유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라 하겠다. 이처럼 자유의 원리는 구성원들에게 입법권과 법의 준수 의무를 수행하는 법적 주체가 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의존의 원리는 국가의 구성원은 신민으로서 모두가 단 하나의 공통된 입법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법에 의존한다면 사회적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통된 법에 의존할 때 평화가 가능하다. 의존의 원리는 ‘법의 통일성’을 요청한다.

셋째, 평등의 원칙은 국가의 구성원들은 국민으로서 예외 없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평등은 ‘어떤 사람이 그 역시 구속되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그 법률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시민들 간의 관계’(명화: 26)이다. 평등의 원칙은 ‘법 앞의 평등’을 요청한다.

공화정의 통치체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칸트는 삼권분립을 공화정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국가는 세 가지 권력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삼중의 인격 안에 보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의지를 내포한다. 그것은 입법자의 인격 속에 있는 주권, (법에 순종하는) 통치자의 인격 속에 있는 집행권, 재판관의 인격 안에 있는 사법권이다.”(법: §45) 독점된 권력은 개인의 자유에 위협적이다. 권력은 권력에 의해 견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권력분립은 권력들 간의 견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자유를 보호하는 기제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공화정과 민주정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칸트에 의하면, 국가 형태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하나의 기준은 주권의 소유자로서, 국가 형태는 일인이 지배하는 군주정, 소수가 지배하는 귀족정,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으로 분류된다. 다른 하나는 통치방식으로서, 국가 형태는 공화정과 전제정으로 분류된다. “공화정은 입법부로부터 집행권을 분리시키는 정치 원리다. 전제정은 국가 스스로 포고한 법률을 국가가 전제적으로 지배자에 의해 지배자 자신의 의지로 취급된다.”(명화: 29) 공화정과 전제정의 결정적 차이는 권력분립에 있다.

칸트의 분류방식에 따르면, 민주정과 공화정은 차원이 다른 정체이다. 따라서 민주정이 공화적일수도 있고 전제적일수도 있는 것이다. 칸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정은 직접적인 형태의 민주정이다. 논리적으로 직접 민주정에서는 인민 모두가 입법권과 집행권을 독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칸트는 민주정은 공화적일 수 없고 전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칸트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공화정의 본질적 특징인 권력분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제로서 ‘대의제’를 제시한다. “법의 개념에 부합하려면, 통치 방식은 대의주의 형태를 취해야만 하며, 그리고 이

체계 속에서만 공화정이 가능하다. 만일 대의주의를 취하지 못한다면, 통치 방식은 전체적이 되거나 독단적이 된다.”(평화: 32)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정은 전체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추구하는 공화정은 현대의 민주정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화정은 이루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천사들의 국가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칸트는 악마의 종족조차도 공화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공화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제도는 도덕성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좋은 국가 체제 아래에서만 국민의 훌륭한 도덕성이 기대된다.”(평화: 54)

칸트에 따르면, 진보를 지향하는 역사가 인류에게 부여하는 과제는 공화정을 이루는 것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해결하라고 강요하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을 보편적으로 관장하는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 외적인 법 아래에 있는 자유가 불가항력적인 힘과 가능한 한 최대로 결합한 사회인 완전히 정당한 시민적 체제가 인류를 위한 자연의 최상의 과제임이 틀림없다.”(보편사: 25-26) 그는 이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꿈꾼다. 칸트는 공화국을 이상적인 정체로 본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공화국이 자유, 평등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적의 정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합법성의 증가를 통해 도덕성의 증가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칸트는 도덕성을 근거로 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상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합법성과 도덕성의 일치를 통한 보다 완벽한 공화국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2) 윤리적 공동체: 자기완성과 타인의 행복

인간에게는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악한 원리들의 지속적인 공격과 시련을 극복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람들이 선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책무를 각자가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인간들과 함께 있을 때, 질투, 지배욕, 소유욕 그리고 이들과 결합되어 있는 적대적 성향들이 악한 원리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종교: 296) 따라서 악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길은 개인들의 덕에 기대하는 대신에 덕의 법칙들에 따라서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인간은 윤리적 공동체의 성원이 되기 위해 윤리적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법리적 자연 상태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의 상태인 것처럼, 윤리적 자연 상태는 악에 의한 부당한 반목의 상태이다.”(종교: 301) 윤리적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는 개개인의 도덕적 완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덕의 원리에 따라 하나의 체계로 통합된 윤리적 공동체가 필요하다.

순전한 덕의 법칙들 아래에서의 인간들의 윤리적 결합을 윤리적 사회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 법칙들이 공적인 한에서는 윤리적-시민적(법적-시민적과 대비되는) 사회, 또는 윤리적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윤리적 공동체는 정치적 공동체의 한 가운데에, 그것도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성립한다. 그러나 저 윤리적 공동체는 하나의 특수한, 그것에 특유한 통합 원리(덕)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또한 정치적 공동체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형식과 기본체제를 갖는다. ... 윤리적 공동체는 윤리적 국가, 다시 말해 (선한 원리의) 덕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다.(종교: 297)

칸트는 그 자체가 의무인 형식적인 도덕법칙과 ‘의무이면서 동시에 목적인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 추구’를 덕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윤리적 공동체는 사람들이 도덕법칙 그 자체를 의무의 동기로 삼고,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의 관심으로 결성된 체제라 하겠다. 이러한 윤리적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공동체, 즉 공화국의 구성원들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체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 공동체는 정치적 공동체와 다른 원리를 따른다. 정치적 공동체는 법의 이념을 따르지만, 윤리적 공동체는 덕의 이념을 따른다. 정치적 공동체에서는 사람이 주권자이지만 윤리적 공동체에서는 신이 주권자다. “윤리적 공동체는 오직 신적 지시명령 아래에 있는 국민, 다시 말해 신의 국민으로서만, 그것도 덕 법칙들에 따르는 신의 국민으로서만 생각 가능한 것이다.”(종교: 305) 따라서 윤리적 공동체 개념은 윤리적 법칙 아래의 신의 국민이라는 개념이다. 다만 여기에서의 신은 계시종교의 신이 아니라 이성종교에서 요청된 신이다.

칸트에 따르면, 신의 국민의 이념은 교회의 형식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종교: 307) 따라서 그는 가시적인 그리스도교 교회를 원형으로 하여 비가시적 교회로서 윤리적 공동체의 작동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종교: 309) 첫째는 보편성의 원리다. 교회는 우연적인 의견들로 나뉘고 불화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의도에 관한한 그들을 필연적으로 하나의 유일한 교회 안으로 보편적으로 통합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그러므로 아무런 종파 분열도 없는) 그러한 원칙들 위에 건설되어야 한다. 둘째는 순수성의 원리다. 교회는 미신의 우매함과 광신의 망상이 아닌 오직 도덕적 동기 아래서 통합되어야 한다. 셋째는 자유의 원리다. 교회 구성원들 상호 간의 내적 관계뿐만 아니

라 교회의 정치권력과의 외적 관계는 모두가 자유 국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불변성의 원리다. 교회는 상황에 따라 규정들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변경될 수 없는 기본적인 원칙, 요컨대 확실한 교회의 목적 이념을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에 따르면, 교회를 원형으로 하는 “윤리적 공동체의 기본체제는 (한 사람의 교황이나 대주교들 아래에 있는) 군주정도 아니고, (감독들과 고위성직자들 아래에 있는) 귀족정도 아니며, (종파적 광명주의자들로서의) 민주정도 아니다. 이 기본체제는 한 사람의 공동의, 비록 불가사의적이거나, 도덕적인 아버지 아래에 있는, 가정조합(가족)에 비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신의 뜻을 알고, 동시에 그들 모든 성원들과 혈연관계에 있는 신의 신성한 아들이 신을 대신하여 신의 뜻을 이들이 가까이 알게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아버지를 흠송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 간에 자유의지적이고, 보편적이며 영속적인 심정적 통합체로 들어서게 하는 한에서 말이다.”(종교: 310)

공화국과 윤리적 공동체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두 원리는 보다 완벽하고 영원한 사회적 조화와 평화를 위한 조건이다. 공화국의 법적-시민상태는 강제적인 법을 통해 자유에 대한 방해물 저지하는 소극적인 기능을 한다. 윤리적 공동체의 윤리적-시민상태는 공동체의 법을 신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악의 원리에 대항해서 싸우는 적극적인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것처럼 공화국 없이는 윤리적 공동체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리적 공동체는 공화국을 보완하는 원리라 하겠다.(정성관, 2016) 이를 통해서 칸트는 합법성과 도덕성의 일치를 기대한다.

IV. 결론

칸트 철학은 공공성의 담론 자원을 풍부하게 매장하고 있는 광맥이라 하겠다. 칸트 철학이 공공성에 대해 갖는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주체 측면에서 사람들은 자율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자율적 주체가 되기 위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성숙한 인간이, 도덕법칙에 따라 존치를 세우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도덕적 주체로서 선한 인간이, 그리고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주체로서 자립적, 능동적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과정적 측면에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총체적 오류의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토론에 필요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공개적인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셋째, 내용적 측면에서 공화정의 가치들과 윤리적 공동체의 가치가 실현되어

야 한다. 예컨대 법의 지배, 자유, 평등, 평화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로서 자기완성과 타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칸트에 대한 논의에서 실천적 차원에서 행정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행위주체 측면에서 행정은 제한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넓은 의미에서 법적 주체로 즉 능동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는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절제하는 방식의 사고와 태도 그리고 행동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행정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둘째, 절차적 측면에서 행정은 공론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이성을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들의 이성적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은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행정은 정보가 충분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저비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내용적 측면에서 정부는 공화주의 원리와 법의 지배 원리에 따라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자유, 평등,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화주의 원리는 분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부처들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 법치주의원리는 법 앞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행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장치가 설계되어야 한다.

칸트에 대한 논의에서 이론적 차원에서 행정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일반적으로 칸트는 현상계와 본체계를 나눔으로써 별개의 이론적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 특히 신칸트주의자들이 이러한 입장에 있다. 과학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의 입장은 분명하다.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실천이성과 경험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성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실천이성이 이론이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행정이론의 구성에 있어서 사실의 영역과 규범의 영역을 구분하여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실천적 차원에서 기술적, 실용적, 도덕적 관심을 갖는다. 기술적 실천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원하는 물리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실용적 실천은 행복이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이 나의 의도에 따라 행위하도록 유도하는

24 「정부학연구」 제28권 제2호(2022)

것이다. 도덕적 실천은 도덕법칙의 요청에 따라 행위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이론은 기술적 실천과 실용적 실천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도덕적 실천은 윤리학에서 따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본다. 그러나 칸트는 도덕적 실천에 의해 기술적, 실용적 실천이 제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적, 실용적 실천에 경도된 행정연구가 도덕적 실천을 함께 담아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안. 2000. 《도덕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칸트의 도덕철학》. 서울: 조합공동체 소나무.
- 김상환. 2019. 《왜 칸트인가: 인류 정신사를 완전히 뒤바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파주: 21세기북스.
- 소영진. 2008. “공공성의 개념적 접근,” 윤수재·이민호·채종현 편(2008).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32-63. 서울: 법문사.
- 이승훈. 2008.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13-45.
- 임의영. 2003.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의 조건.” 《정부학연구》, 9(1): 23-50.
- 정성관. 2016. “칸트와 이상국가.” 《칸트연구》, 37: 149-168.
- Arendt, Hannah. 1982.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김선욱 역(2002). 《칸트 정치철학 강의》. 서울: 푸른숲.
- Foucault, Michel. 1999. “계몽이란 무엇인가?” 정일준 편역.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 177-200. 새물결.
- _____. 2015. *Qu'est-ce que la critique? : suivie de, La culture de soi*. Paris: J. Vrin. 심세광·전혜리 역(2016).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수양》. 파주: 동녘.
- Gehardt, Volker. 1995. *Immanuel Kants Entwurf <Zum ewigen Friede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김종기 역(2007). 《다시 읽는 칸트의 영구평화론》. 서울: 백산서당.
- Guyer, Paul. 2007. *Kant's Groundwork for the Metaphysics of Morals: A Reader's Guide*. London/ New York: Continuum.
- Hinske, Norbert. 1980. *Kant als Herausforderung an die Gegenwart*. Freiburg: Karl Alber. 이엽·김수배 역(2004). 《현대에 도전하는 칸트》. 서울: 이학사.
- Kant, Immanuel. 1781/1787. *Kritik der reinen Vernunft*. 백종현 역(2006). 《순수 이성비판》. 서울: 아카넷. **[순수]**
- _____. 1788. *Kritik der praktische Vernunft*. 백종현 역(2002). 《실천이성비판》. 서울: 아카넷. **[실천]**

- _____. 1793. *Kritik der Urteilskraft*. 백종현 역(2009). 《판단력비판》. 서울: 아카넷. **[판단]**
- _____. 1797. *Metaphysische Aufansgrüde der Tugendlehre*. Königsberg: Friedrich Nicolovius. 백종현 역(2012). “덕이론.” 《윤리형이상학》. 서울: 아카넷. **[덕]**
- _____. 1797 · 1798. *Die Metaphysik der Sitten*. 《윤리형이상학》. 백종현 역. 서울: 아카넷. 2012. **[윤리]**
- _____. 1798. *Metaphysische Aufansgrüde der Rechtslehre*. Königsberg: Friedrich Nicolovius. 백종현 역(2012). “법이론.” 《윤리형이상학》. 서울: 아카넷. **[법]**
- _____. 1999. *Correspondence*. translated and edited by A. Zweig.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편지]**
- _____. 2002. *Groundwork for the Metaphysics of Morals*. Edited and translated by Allen W. Woo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경초]**
- _____. 2005. *Notes and Fragments*. edited by P. Guyer, translated by C. Bowman, P. Guyer and F. Rauscher.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단편]**
- _____. 2007. “Lectures on Pedagogy(1803).” G. Zöllner and R.B. Loudon(eds.) *Anthropology, History, and Edu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교육]**
- _____. 2010. “On the Common Saying: This May be True in Theory But it does not Apply in Practice.” in H.S. Reiss(ed.). *Kant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정성관 역(2019). “이론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실천에는 쓸모없다고 하는 속설.” 《비판기저작 I (1784-1794)》, 263-317. 파주: 한길사. **[이론]**
- _____. 2010. “What is Enlightenment?” in H.S. Reiss(ed.). *Kant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이한구 편역(2009).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칸트의 역사철학》, 13-22. 파주: 서광사. **[계몽]**
- _____. 2010. “What is Orientation in Thinking?” in H.S. Reiss(ed.). *Kant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홍우람 역(2019). “사유 안에서 방향 정하기란 무엇인가.” 《비판기저

작 I (1784-1794)», 91-111. 파주: 한길사. **[사유]**

_____. 2010. *Perpetual Peace: Philosophical Sketch*. in *Kant Political Writings*. edited by H.S. Reis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한구 역(2008). «영구 평화론: 하나의 철학적 기획». 파주: 서광사. **[평화]**

Philosophical Basis of Publicness: Focusing on I. Kant's Thought

Lim, Euy-Young

Publicness is a concept that pursues harmony between public and private. This paper focuses on the thought of Immanuel Kant, who ushered in a new paradigm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by elucidating the essence of reason and the method of existence of an independent human being, at the highest point in the modern age of reason. First, this paper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Kant's thought. And in his thoughts, we discover conceptual resources that can enable development of the meaning of publicness. Publicness is a concept in which community actors, realize the value of justice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This paper discovers ideological resources of publicness in terms of agent, procedure, and cont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ept of a mature human being, a good human being, and an active citizen in the aspect of the agent, the concept of public use of reason, openness, and the impossibility of total error in the procedural aspect, and the republic (rule of law, freedom, equality, peace) and ethical community (pursuit of self-fulfillment and the happiness of others) in the content aspect. Finally, this paper briefly examines the administrative implications of the discussion of Kantian thought.

※ Keywords: Kant, reason, morality, publicness, republic